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주요 언론사

# 교 육 기 사

2025. 9. 23.(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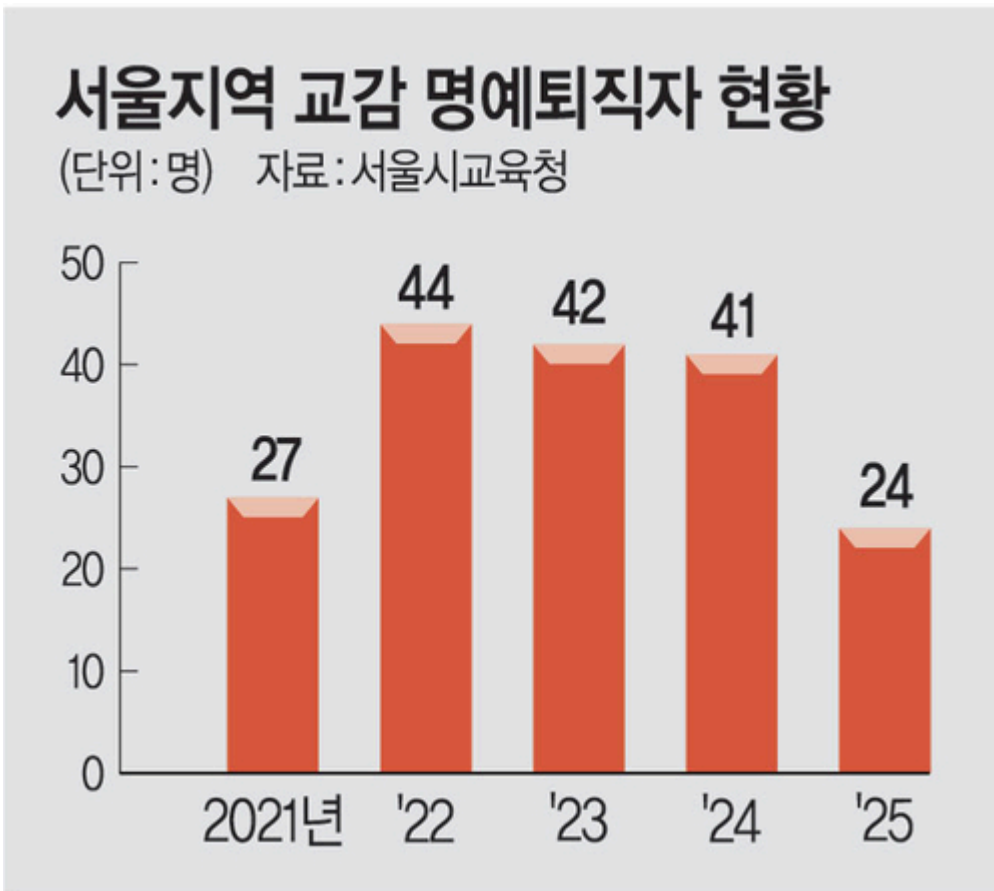
[www.kfta.or.kr](http://www.kfta.or.kr)

문화일보

# 격무 시달리는 교감들... 교장승진 포기 후 명예퇴직 5년간 서울서만 178명

입력 2025.09.22. 오후 12:04

학사관리에 골치 민원까지 처리  
과도한 업무에도 수당 10만원뿐



최근 5년 새 서울에서만 교감 178명이 교장 진급을 포기하고 명예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사관리에 학교폭력 대응, 민원처리, 각종 위원회 참석 등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이 교감을 그만두는 이유로 꼽힌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는 교감이 기피 직책이 된 지 오래됐다는 말이 나온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까지 24명의 유초등·중등 교감이 명예퇴직을 선택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7명 △2022년 44명 △2023년 42명 △2024년 41명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명예퇴직 규모가 커졌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명예퇴직이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장·교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전국 교감 2581명이 정년 전에 퇴직했다.

현직 교감들은 “교장까지 딱 한 단계 남았는데 도저히 버티기가 힘드니 중도 하차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지역 중학교 교감 A 씨는 “학생들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못 타게 지도해 달라”는 인근 주민의 민원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배포한 ‘교감 업무추진 길라잡이’에 따르면 교감은 학사관리 외에 학교 성과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내인사 및 복무관리, 각종 민원 대응 등 총 15개 분야 일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10여 개의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교감에게 주어지는 수당은 10만 원뿐이다.

과거에는 학교의 실세로 통했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위상도 찾기 힘들다. 한 초등학교 교감 B 씨는 “예전에는 교감 되려는 사람이 줄을 섰지만, 이제는 교감이 일선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 샌드위치가 돼버려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감으로 가는 코스인 부장 보직부터 말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감이 직면하게 되는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부족한 처우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kimhaha@munhwa.com), 김린아 기자(linaya@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38302>

---



# 김광수 제주교육감 "고교학점제 이수 학점 과감히 줄여야"

입력 2025.09.22. 오전 11:04 수정 2025.09.22. 오후 2:05

현재 졸업요건 3년간 192학점 이수 적용  
"180~160학점으로 줄이자는 주장에 동의"



[제주=뉴스시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22일 오전 제주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교육청 제공) 2025.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시스] 양영전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22일 "고교학점제는 힘들어도 가야 한다는 게 전국 교육감들의 큰 원칙"이라면서도 "졸업 이수 학점 기준을 180~160 학점으로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고교학점제가 처음에 절대평가였던 것에서 상대평가가 되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 조금씩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면서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올해 상반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올해 입학생들은 기존 학년별 진급 기준(수업일수의 2/3 충족)과 함께 졸업요건으로 3년간 192학점 이수가 적용된다. 과목별 이수 기준도 새롭게 도입돼 출석률 2/3이상, 학업 성취율 40% 등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제도 개선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제도는 학생들이 각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학업 성취율 40%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예방·보충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과목 수와 단위 수를 줄여줘서 여유를 갖게 하고, 학생이 좋아하는 분야의 교과를 수강하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런 최초의 의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2028년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29년이나 2030년 수능부터는 서술형 평가를 포함해 절대평가로 전환해서 교과를 좀 줄여 주면서 고교학점제 본연의 취지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양영전 기자(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스시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96595>

---

# 11월까지 과목 선택인데...교육부, 고교학점제 협의와 '불협화음' 사이 줄타기

기사입력 : 2025년09월22일 15:44 | 최종수정 : 2025년09월22일 15:44

**19일 개선방안 발표 돌연 취소..."국교위 불협화음은 사실아냐"  
최교진 교육장관, 취임 첫주부터 고교학점제 해결 행보 지속  
"서울대 10개 언제 만드나" 우려도...교육부 "조만간 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중등교육 현장의 가장 큰 현안인 고교학점제 혼란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개선 방안 발표를 하루 남기고 돌연 취소하는 등 불안한 일주일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과목을 최종 선택해야 하는 11월 전까지 최대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찾았다. 그는 금산여고 수업을 참관한 뒤 교사와 학생, 충남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현장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빈 기자]

16일에는 장관 취임 후 시도교육감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날 간담회에서도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4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 연맹(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와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첫 중등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학교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준비한 제도였기 때문에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적극적인 행보와 달리 대책을 내놓기에는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최 장관은 애초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18일) 오전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내부 의견 조율 실패 내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동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장관의 방안에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최성보) 개편과 연계된 교사 업무 경감안이 담겼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를 추진하려면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까지 손봐야 한다.

국교위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자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교위와 교육부 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공개회의를 연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 역시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다.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출입기자단 공지일(15일) 기준 적어도 사흘 전에 잡아둔 장관의 첫 브리핑 일정을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는 점에서 잡음을 피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간도 촉박하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이 11월 최종적으로 선택과목을 결정한 뒤 2학년에 올라가는 내년부터는 각자 고른 선택과목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 같은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개선 방안 발표를) 빨리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정과제를 고려했을 때 중등교육 현안 해결에 쏠린 최 장관의 첫행보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등교육 현장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번 정부 교육공약의 캐치프레이즈이자 브랜드로 사실상 굳어진 상황이라 중등교사 출신 장관에 대한 우려도 기대만큼 큰 것이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세 개만 만들어도 성공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다. 청사진이라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지금 열심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 일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 [단독] 교사 정치기본권· 교실 CCTV 설치 법 교육위 법안소위서 '보류'

✎ 장재훈 기자 | ⓒ 승인 2025.09.22 18:40

교원정치기본권, 학습권 침해- 이해충돌 우려 '신중검토'로 선회



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실에도 CCTV 설치를 제도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국회교육위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끝에 결국 10월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교실 CCTV 설치 법안과 국립대 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법안 역시 보류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교원 정치기본권 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 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김문수, 고민정 의원 등이 발의했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교육부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수 있고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채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 대구, 경기, 충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과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등이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검토의견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이 신분을 유지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자칫 교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선거 일정에 따른 학기 중 휴직 등으로 학교 운영에 혼란이 예상되며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학생 학습권 보장에도 어려움이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타 직군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 지위 및 행정력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으로 선거의 불공정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교원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 허용 시 교육현장에 정치적 논쟁이 야기될 수 있으며 학생에게 특정 정치 이념 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선거일정에 따른 휴직 등으로 잦은 교사 교체, 교육현장의 인력 부족 심화로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정적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학습권 침해를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고 타 직군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본인의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가 될 우려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교원의 신분으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허용할지 여부는 교원의 피선거권이나 선거 운동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교원의 직무전념성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유치중등교원이 휴직을 하고 교원신분으로 교육감 선거 등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 하늘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교실 CCTV 설치법안도 이날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다만 이 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연내 교육위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총**은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교원·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행동·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원·학생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 교육활동 위축할 것”이라며 “교실이 신뢰·협력 아닌 불신·감시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류했지만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장재훈 기자

---

저작권자 © 에듀프레스(edupres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도교육청·제주교총, 교원 업무 경감·복리 증진 등 현장 요구 반영 합의

원성심 기자 | 승인 2025.09.22 16:25

22일 15조 37개 조항 합의서 조인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와 교섭·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열고 교육활동보호 등 교섭·협약 요구안 15조 37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광수 교육감과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교섭·협의를 지난해 11월 12일 제주교총이 교섭안을 제출한 이후 5차례의 실무교섭과 본 교섭 협의를 거쳐 최종 도출된 결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 후생 증진, 유치원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등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이번 합의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성심 기자

# 제주교육청-교총, 영양교사 처우 개선 합의

☞ 김기연 기자 | Ⓞ 승인 2025.09.22 18:38

2025년 교섭·협약 합의서 체결... 정원 확보·행정 간소화 추진  
대규모 학교 추가 배치 검토... 학생 건강권·교육복지 실현 강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제주교육청)이 교육단체와 함께 영양교사 정원 확보와 처우 개선, 대규모 학교의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 이하 제주교총)는 22일 제주교육청 상황실에서 '2025년 교섭·협약 합의서' 조인식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등을 포함한 교섭·협약의 요구안 15조 37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2025년 교섭·협약 합의서' 조인식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이날 조인식에는 김광수 교육감과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서는 지난해 11월 제주교총이 교섭안을 제출한 이후 다섯 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 협의를 거쳐 도출됐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 후생 증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등 현장 교원의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제14조에 '영양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제주교육청은 학생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영양교사 처우 개선에 노력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교육청은 영양교사가 학생 건강관리와 영양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된 우유·가스·인건비 품의는 연 1회로 줄이고, 법정 장부 외 문서 작업은 축소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며, 추가 정원이 확보될 경우 2·3식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이후에는 43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이번 합의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연 기자

# 미래엔이 첫 창작동요 부르기대회 연다

입력 2025.09.22. 오전 9:52

초등생 4명 이상 35명 이하 합창팀... 25일까지 참가 접수



[파이낸셜뉴스] 미래엔은 오는 11월 1일 '2025 제1회 미래엔 전국 어린이 창작동요 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 어린이 창작동요 대회는 아이들의 순수한 창의성과 감성을 응원하고, 창작자와 어린이가 함께 만드는 음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회는 △창작동요 공모전 △창작동요 부르기대회 △창작동요 챌린지 총 3개 부문으로 나뉘며, 창작과 부르기를 연계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창작동요 부르기대회'는 공모전에서 선발된 창작동요 8곡 중 1곡을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지정곡은 △그런 친구가 될게(한은선 작사·홍민성 작곡) △나는 사과(박주성 작사·안청호 작곡) △너의 이름을 지켜줄게(이수영 작사·최보람 작곡) △말썽쟁이 감기(심진하 작사·설승민 작곡) △모이면 별자리(변동준·김승재 작사·작곡) △빙글빙글 사계절(한은선 작사·손정아 작곡) △스마일 치즈(윤대림·문정은 작사·윤대림 작곡) △오 늘은 또 어떤 멋진 일이(이세일 작사·김수지 작곡) 등 총 8곡이다.

예선 참가 접수는 25일까지 '미래엔 창작동요 부르기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4명 이상 35명 이하의 합창팀이다. 참가팀은 지정곡 중 한 곡과 주제곡을 함께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전체공개로 업로드한 뒤, 해당 URL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본선 진출팀은 9월 30일 발표된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16개 팀은 11월 1일 서울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선 시상은 대상 1팀(상금 300만 원), 금상 1팀(200만 원), 은상 2팀(각 100만 원), 동상 4팀(각 70만 원), 장려상 8팀(각 30만 원)으로 총 16개 팀에 수여되며, 공모전과 부르기대회를 합한 총상금 규모는 2000만원이다.

미래엔 신광수 대표는 "이번 대회는 공모전과 경연을 연결해 창작자와 어린이가 함께 만드는 종합 음악 축제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아이들이 무대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자신감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학교에서 음악 및 동요 부르기를 권장하는 대회로 학교 안 선생님과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창작동요 챌린지'는 대회 주제곡 '나의 미래엔'을 활용해 노래, 뮤직비디오, 댄스, 뮤지컬, 신체 표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다. 참가자는 대회 주제곡인 '나의 미래엔'을 활용한 영상을 유튜브에 전체공개로 업로드한 뒤 대회 홈페이지에 URL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수 참가자 중 베스트 퍼포먼스상 10팀과 인기 퍼포먼스상 10팀을 선정해 총 2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김만기 기자 (monarch@fnnews.com)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뉴스

## 폐지 서명 운동까지...고교학점제 혼란, 해법은?

공유 목록

서진석 기자 | 2025. 09. 22 | 306 조회



00:00 | 07:38

저화질

### [EBS 뉴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과목을 골라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과목 선택을 앞두고, 일부 교원단체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 [VCR]

시야카드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메뉴 더보기+

일 캐시백!

Plant+로 즐겨

AD

고1 시작으로 전면 도입  
선택권 강화 취지

준비 부족에 현장 혼란  
교원단체 '폐지 서명'까지

교육부 대책 발표는 연기  
"국교위와 논의 필요"

혼란의 고교학점제, 해법은?

-----

서현아 앵커  
혼란의 고교학점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한섭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선,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폐지 주장하고 계신데, 고교학점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한섭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2이상의 학점을 이수했을 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첫 번째 문제는 학점 이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졸업 판정하는데 고교학점제는 과목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과목별 이수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목 선택의 문제입니다.

-----



가직 대학별 입시요강이 발표되지 않아서 학생과 학부

모가 혼란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서현아 앵커

졸업 요건이 되는 최소 성취 기준 보장지도의 문제와 과목 선택권이 자체가 문제라고도 지적해주셨는데요.

어떤 우려가 있는 겁니까?

이한섭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목표만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입시경쟁교육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입시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과목별로 이수기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졸업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최소성취기준보장제라는 이름으로 성적으로 학생을 학교밖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입학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깨우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고1 공통과목과 고2,3의 선택과목만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적용하자고 하는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절충안을 택할 순 없는 겁니까?

이한섭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많은 교육감들이 고교학점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 하나 하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교육감들은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여야 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서현아 앵커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이걸 없애면 기초학력은 어떤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한섭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적을 보장하는 방식이 과목별로 일정 기준 이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의 인지, 정서적 발달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소성취수준보장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일 확률이 큼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면 얼마나 무책임한 제도인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구조적인 지원이 없이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 했다고 낙인을 찍는 형태의 제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한섭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서현아 앵커

또 하나 고교학점제의 문제로 상대평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이한섭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상대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필요없는 전형적인 줄세우기 평가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평가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대평가는 결국 주변 친구들을 실질적인 경쟁자로 몰아가는 평가방식입니다.

반에서 1명에서 장학금을 줘야 하는 경우 등수를 나눌 수 있지만 성적표에 성적을 기입할 때 상대평가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상대평가가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에 교육부가 이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중요한 교원단체로서 교육부라든지, 국교위와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예정이십니까?

이한섭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교육입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는 것이 공부입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 학습과정입니다.

하지만 기본교육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삶에 근거하지 않으면 교육은 거짓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교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수업이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알맹이는 없습니다.

교사가 교사로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합리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서진석 기자realstone@ebs.co.kr / EBS NEWS

해당 뉴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0 0

Copyright © EBS(www.ebs.co.kr).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배열 기본방침

EBS소개 · EBS광고 · 저작권 침해 제보 · EBS클린신고 · 콘텐츠 구매/제휴 문의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1343 (한국교육방송  
공사사장 김유열)

시청자불만전담 : hotline@ebs.co.kr   부가통신사업신고 : 10077 통신판매업신고 : 2017-고양일산동-1415 [사업자  
정보확인]



[인증범위] EBS교육 포털 웹서비스  
[유효기간] 2025.04.16 ~ 2028.04.15

[원격지원 >](#)    [FAQ >](#)



1588-1580  
helpdesk@ebs.co.kr

Copyright © EBS. All Rights Reserved.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메뉴  
더보기+

# [2025 국감] 교권 실추에 ‘탈출’하는 교대생… 신입생 7.5%는 학업 중단

✎ 김소현 기자 | ⓒ 승인 2025.09.22 18:29

지난해 초등교원양성기관 신입생, 중도 탈락 322명 중 292명은 자퇴  
행정업무 과중, 교권 실추… “다른 업종 알아보는 젊은 선생님 많아”  
기초학력 지원, 다문화학생 등 교육 수요 다양화… “종합적 대책 필요”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교사 선호도 감소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작년 한 해 전국 13개교 교대·대학 초등교육과에서 중도 탈락한 재학생이 총 6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교원양성기관(교대·대학 초등교육과) 중도 탈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기관 재학생 중도 탈락 수는 640명(3.9%)으로, 2023년 672명(4.0%)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교대가 중도 탈락 학생 비율 7.3%(103명)로 가장 높았으며, △전주교대 5.8%(65명) △경인교대 4.7%(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교대는 2.1%(28명)로 가장 낮았다.

특히 신입생 중도 탈락률은 더욱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신입생 중도 탈락률은 8.0%(351명)에 달했으며, 지난해도 7.5%(322명)로 유사한 수치를 보인 바 있다. 학교별로는 서울교대가 13.7%(51명)로 가장 높았으며, 경인교대가 12.6%(82명)로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전국 초등교원양성기관별 재학생 중도탈락 현황>

학교명	재적학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단위: 명)									중도탈락학생비율(%) (B/A)×100
		계(B)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 경고	학생 활동	유급 제적	재학여 초과	기타	
경인교육대학교	2,508	118	5	9	101	-	1	2	-	-	4.7%
공주교육대학교	1,422	50	-	1	47	2	-	-	-	-	3.5%
광주교육대학교	1,319	28	-	1	24	-	-	2	-	1	2.1%
대구교육대학교	2,454	72	17	4	47	-	-	4	-	-	2.9%
부산교육대학교	1,476	37	3	7	27	-	-	-	-	-	2.5%
서울교육대학교	1,413	103	4	13	82	4	-	-	-	-	7.3%
전주교육대학교	1,118	65	7	-	55	-	-	2	-	1	5.8%
진주교육대학교	1,271	46	2	5	39	-	-	-	-	-	3.6%
청주교육대학교	1,159	35	2	2	28	2	1	-	-	-	3.0%
춘천교육대학교	1,285	50	10	1	34	5	-	-	-	-	3.9%
이화여자대학교	176	7	-	-	7	-	-	-	-	-	4.0%
제주대학교	471	17	1	2	13	1	-	-	-	-	3.6%
한국교원대학교	445	12	-	-	12	-	-	-	-	-	2.7%
계	16,517	640	51	45	516	14	2	10	-	2	3.9%

(자료: 교육부)

(표=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 “교육 수요 다양해지는데 탈출은 지능 순?”... 과도한 행정업무·실추된 교권에 사명감 사라져 =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교권 실추와 노동 조건 열악 등을 꼽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교육공동체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을 느낀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교원 비율은 41.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올해 진지하게 교직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한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4명(38.9%)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경기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젊은 선생님들일수록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사라졌으며, 젊은 선생님들은 호봉제로 본봉이 굉장히 낮아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었지만,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사라져 교실 현장도 조심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아이들이 교실에서 뛰어다닐 때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해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행정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도 교사를 힘들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교사 신규 채용 감축을 예고해 교사 선호도 감소는 더욱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3113명으로 올해(4272명)보다 약 27% 감소하며, 2026학년도 교대 입학정원도 총 3153명으로 정원 감축된다.

강경숙 의원은 “과밀학급이나 농어촌지역 등은 여전히 교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초학력 지원, 학생 정서지원, 다문화학생 증가 등 교육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감축 정책이 아니라 이를 고려한 종합적 교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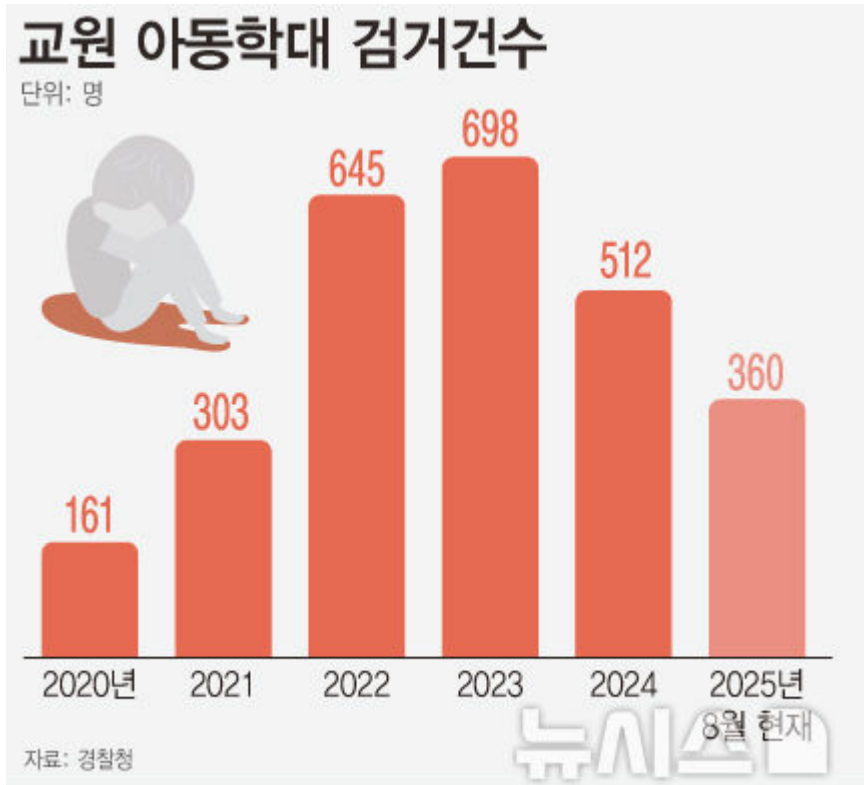
**김소현 기자** sulsul@unn.net



# 교권 보호 영향일까... 지난해 아동학대 교원 검거 건수 27% 감소

입력 2025.09.23. 오전 6:00 수정 2025.09.23. 오전 7:13

진선미 의원실, 교원 아동학대 검거 건수  
2024년 512건...전년 대비 27% 가량 감소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감 의견서 제도 도입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없도록 세심히 관리"



25.09.23 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세종=뉴스시스]용운신 정예빈 기자 = 지난해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검거 건수가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원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마련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20~2025년)간 교원 아동학대 검거 건수를 보면 2024년 교원의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512건으로 2023년(698건) 이후 27%가량 감소했다. 올해 1~8월 360건을 기록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아동학대 검거 건수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수치에 포함된다. 2020년 161건에서 2021년 303건, 2022년 645건, 2023년 69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검거 건수와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아동학대 검거 건수를 보면 2020년 5551건에서 2021년 1만15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2년 1만1970건, 2023년 1만3015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1만2786건으로 줄었다.

2020년 9월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21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늘면서 검거 건수 또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 제도가 마련되면서 교원 검거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8월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됐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관할 교육감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인 검토 의견을 내는 제도다. 교원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제도 도입 후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1065건 가운데 70%에 가까운 738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의견 제출제도 뿐아니라 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근거도 마련된 영향"이라며 "사회적 인식이 교사의 교육활동 위주로 바뀐 영향으로 교원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 이후 교원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편향·막말 논란' 최교진, 공식 계정으로 SNS 활동 재개

입력 2025.09.22. 오후 4:36 수정 2025.09.22. 오후 4:37

교육장관 공식계정 개설...정책 및 공식 활동 소개에 한정될 듯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부터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계정에 취임사 게시글을 올리며 SNS 소통에 나섰다.

해당 SNS 계정은 최 부총리 개인이 아닌, 교육부가 운영하는 장관 공식 계정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교육부 주요 정책 소개를 비롯해 최 부총리 공식 활동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등 제한적으로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취임하기 전부터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며 지속해서 SNS에 게시글을 게재해 왔다.

그러나 성폭행을 저지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천안함 침몰 음모론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최 부총리는 정치 편향과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그는 지난 4일 "청문회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저의 SNS 활동이 오해와 우려가 있었기에 활동 자제를 약속드렸다"며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함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고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장성희 기자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01617>

---



# 부산시교육청, 내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증원... 현장 근무 부담 완화

승인 : 2025-09-22 15:54:23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개선 본격화  
시간제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 추진



부산교육청

아시아투데이 조영돌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해 인력 채용에 나선다.

2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1000명 이상)는 170명 → 140~150명 △ 중·고·특수 1식 학교는 160명~190명 → 150명 △ 2식 (석식) 학교는 400명 → 200명으로 완화함으로써 조리종사자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2024년, 2025년 매해 100명씩 증원해온 것에 비해 2배 정도 증원 규모를 늘린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그동안 특·광역시 기준 하위권이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은 특·광역시 평균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교육청은 늘봄교실 운영 인력 조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최종안에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늘봄교무행정실무원 배치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조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교육청은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2026년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 수요 조사를 먼저 시작한다. 이는 현장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또 저학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하는 동시에, 교사에게는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본연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조영돌 기자 jyd5933@asiatoday.co.kr

---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딥페이크 피해 심리치료 없어... "징계 기준도 제각각"

조유송 | 승인 2025.09.22 20:27

## 【앵커】

인천 딥페이크 사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정서적 지원은 없었고, 교사들은 반복되는 사건에 무력감을 호소하며 제도적 공백을 지적합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 【기자】

고등학생 딸의 사진이 도용돼 딥페이크 합성물로 퍼진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 A 씨.

딸은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사후 관리나 상담 같은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 역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합니다.

[A 씨 / 피해 학부모: 담임선생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쉬쉬하는 분위기로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향후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인천시교육청 상담 체계도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해준 조언이라고는 경찰에 고소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A 씨 / 피해 학부모: 단지 학교에서도 얘기한 게 경찰에 고소를 해라, 뭐 그 내용밖에 전달받은 게 없어요. 그냥 피해만 당해야 되는 그냥 피해자인 것 뿐 이구나...]

최근 인천에서는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으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교사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정서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사들은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피해 학생이나 교사가 직접 전문 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또 가해 학생 징계 기준도 학교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성민진 / 인천교사노조 대변인: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응팀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처럼 이런 전문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와 정서 회복 지원.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법적 안전망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김민지>



조유송 voice@obs.co.kr

## [사설] 진보 교육감 후보 만드는 친위 단체·포럼

입력 2025.09.23. 오전 3:02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 다만 출마를 점치게 하는 발언이 있었다. “내 나름대로 과제가 남아 있고 요구가 분명하다면 그에 맞게 결정을 할 것이다.”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답이다.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 일부다. 2009년 첫 직선제 이후 13년간 진보 교육감이었다. 보수 진영은 임 교육감이 최초다. 여기에 뚜렷한 경선 주자도 없다. 지금으로서는 ‘임태희 출마 유력’이다.

무주공산 진보진영의 경쟁은 치열하다. 자천타천 유력 후보만 네댓 명에 이른다. 겹쳐서 보이는 출정 방식이 있다. 포럼, 모임 등의 대표를 맡으며 출마 뜻을 낸다. 유은혜 전 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일정이 그랬다. 20일 경기교육 이음포럼의 공동대표에 취임했다. 2023년 설립된 교육계 시민사회단체다.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의 축하로 행사의 중량감도 커졌다.

유 전 장관은 이음포럼의 새 비전을 발표했다. 전인교육, 학습 네트워크, AI와 사람의 연계, 교육 복지 완성 등이다. 교육감선거 출사표로 해석해도 무방해 보인다. 교육감 후보는 정치인이어서는 안 된다. 후보 등록 개시일 전 1년간 당적이 없어야 한다. 유 전 장관은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내려놨다. 비슷한 시기 당적을 내놓은 또 다른 후보군이 있다. 안민선 전 민주당 의원이다. 그도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 대표를 맡았다.

이 단체 역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정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출신으로 교육에 쏟아왔던 애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한 명의 후보군은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다. 2022년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였다. 그도 최근 '경기교육미래포럼'의 대표를 맡았다. 임태희 교육감 4년을 직접 겨냥했다. 상대적으로 출마 의향을 분명히 내 보이고 있다. 이 외에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도 있는데 그의 시민단체 연계 소식은 없다.

살폈듯이 교육감 후보는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선거 조직도 제한된다. 1천300만 경기도에서 치러질 초광역 선거다. 정치·정당을 대신할 조직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 포럼 가동이 그런 면에서 선호될 듯하다. 선거에서 친위대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다. 선거 이후 실세 집단으로 부각할 가능성 또는 우려도 있다. 2026년 교육감선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민단체·포럼 세력화를 교육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3943>

---

# 세종교사노조-강준현 의원,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논의

✎ 육군영 기자 | 🕒 승인 2025.09.22 17:13



세종교사노동조합은 9월 22일 강준현 국회의원을 방문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9월 22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을 방문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교사의 학교 밖 정치활동 권리 확대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사들은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시민권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교사들의 현실과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교사들이 학교 안팎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학생들에게도 진정한 민주 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육군영 기자 rns1234567@naver.com



# 1심 선고 앞둔 신경호 강원교육감 "담대히 재판 임하겠다"

입력 2025.09.22. 오후 4:48 수정 2025.09.22. 오후 4:48

전교조 강원지부 "이번 선고, 강원교육 신뢰 회복 분기점"



신경호 강원교육감 '고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2년 넘게 재판받아온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담대히 재판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결과를 어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내일

결과를 예측하면 내가 판사지"라며 "담대히 자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는 동일하냐는 질문에는 "지켜보겠다"면서 "1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심, 3심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낙후한 강원교육을 위해 일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며 "3년 넘게 열심히 밤낮없이 일했고, 오늘이 지금껏 살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신 교육감 1심 선고는 강원교육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순간"이라며 "강원교육의 불행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인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강원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으며, 정의롭고 엄정한 판결은 강원교육의 미래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지법은 23일 오후 2시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yangdoo@yna.co.kr

양지웅(yangdo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41682>

---

**CJB**

# 예산도 기금도 ‘빨간불’...교육 재정 대책 시급

입력 2025.09.22. 오후 9:04



<앵커>

한때 4조원을 웃돌던 충북교육재정이 해마다 쪼그라들면서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논리가 적용되서인데이.

이대로라면 교육당국이 다양한 교육수요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현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3년동안 충북교육재정

감액 규모입니다.

<그래픽>

2023년 당초 확정통보액보다 4천 5백 13억원이 감액됐고 지난해와 올해도 잇따라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내년 보통 교부금 감액예정액까지 합하면 감액 규모는 7천 5백 76억원에 달합니 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기금을 투입해 대응해왔지만 이마저도 한계 상황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 내부재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 다.//

<인터뷰> 신기철 / 충북교육청

예산과장

"지금 예산이 좀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것은 조정을 해 서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 필요하지 않은 거 비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을 더 쓴다든가..."

당장 학교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내던 시설개선 사업이 주춤하게 됐습니다.

석면제거와 단열 마감재를 제외한 이중창,바닥 교체 등은 후순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올해로 마무리할 계획었던 학교현장의 전자칠판 등 기자재 교체도 원점에서 다시 예산 을 짜고 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교육재정 감축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같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유윤식 / 충북교사노조위원장

"국가재정만큼은 효율성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본질이나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야지 (아니면) 공교육의 질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3년간 감축된 교육재정은

31조 3천억원.

미래 지향적인 공교육 확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교육재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채현석입니다.

채현석 [hschae0714@naver.com](mailto:hschae0714@naver.com),

박희성 [pahs70@naver.com](mailto:pahs70@naver.com)

Copyright © CJB청주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7569>

---

# 굿모닝충청

HOME > 뉴스플러스 > 교육

## 충남교사노조 "교사를 민원 최전선에 세우는 이어드림"

✎ 이종현 기자 | ⓒ 승인 2025.09.22 17:00

충남교육청 시범 운영 계획에 성명 내고 우려



충남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온라인 학부모 소통 서비스 '이어드림'을 7개 교육지원청과 11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노조)이 "교사를 민원 최전선에 세우는 구조적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충남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온라인 학부모 소통 서비스 '이어드림'을 7개 교육지원청과 11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노조)이 "교사를 민원 최전선에 세우는 구조적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어드림은 기본적으로 교육상담을 위한 소통창구로 설계됐지만 현장에서는 상담과 민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학부모의 요구가 모두 교육상담으로 포장돼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는 교권 보호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교사를 민원 응대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다.

노조는 또 집중상담예약 기능에 대해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확인된 상담주간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과 불이익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직원 지정 기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노출, 악성 민원 집중 위험을 우려했다.

이지윤 교권국장은 “이어드림의 취지인 공적 소통 창구 일원화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의 대표전화와 이어드림은 학교 민원대응팀이 관리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별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위원장도 “이어드림은 학부모 친화적 시스템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를 민원 처리의 최전선에 내모는 구조적 폭력성을 갖고 있다”며 “상담·민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집중상담예약과 교직원 지정 기능을 삭제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현 기자 korea8294@naver.com

全北日報

# 전북 교원 교육활동보호 열기 '후끈'

윤이강모 | ①입력 2025-09-22 15:49 | ② 수정 2025-09-22 15:49

## 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교(원)감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2025.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감 설명회'를 개최했다./전북교육청 제공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열기가 뜨거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2025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학교 관리자의 역할 및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에 기반한 학교 단위 민원 대응 방법, 민원 발생 시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지원 체계 등을 설명했다.

또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법률자문 △온라인 심리검사 활용 등을 상세히 소개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교원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온라인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 적극 시행 △교육상담실 구축 △교원안심번호서비스 등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도내 학교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사례도 공유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활동보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보호를 통해 선생님의 수업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감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 교육기관 정보도 유출...내신성적까지 털렸다

## 5년간 교육기관 개인정보 유출

총 317건 발생·573만명 피해  
이름·주소부터 성적까지 노출  
유형 광범위, 학교·학부도 비상  
숏총리 "정보보호체계 전면 정비"

지난 7월 24일 경북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해 접수됐다. 피해자는 1만2466명. 대부분 학생이었으며 이들의 이름, 학번, 생년월일, 학적상태, 환불은행계좌 등이 유출됐다. 이같은 사건은 경북대에서만 벌써 네 번째다. 심지어 2022년 11월 7일에는 피해자가 56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3·4면

KT와 롯데카드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교육기관에서도 대규모 정보 유출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사고는 총 317건. 이에 따른 피해자만 57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기관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청까지 포함했으며, 유출된 내용에는 학생의 이름, 주소·연락처 뿐 아니라 장애등급, 소득분위, 모의고사 성적 등 민감 정보가 총망라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해 신고된 교육부 산하 기관, 대학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는 총 317건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573만251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학교 86건였다.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72건 ▷초등학교 52건 ▷중학교 46건 ▷교육청 29건 ▷교육지원청 18건 ▷기타 교육기관(국인학교·국제학교 등) 13건 ▷유치원 1건 등이었다.

같은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인천시교육청(8건) ▷홍익대(6건) ▷경기도교육청(5건) ▷경북대·서울대(각 4건) ▷연세대(3건) 등이었다.

피해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교육청이 308만8525명으로 가장 컸다. 대학



교는 255만3178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직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곳까지 고려하면 256만6393명 남짓으로 추정된다.

뒤이어 ▷기타 교육기관 3만1319명 ▷고등학교 1만3527명 ▷교육지원청 1만3271명 ▷중학교 1만2961명 ▷초등학교 6501명 ▷유치원 13명 등의 순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

교육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유형의 범위가 넓고 다양했다. 각종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정보가 총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사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뿐 아니라 비상방으로 등록된 보호자 연

락처,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 정보, 성적(내신 총점, 모의고사 백분위, 수능 등급), 특수교육 관련 진단명까지 유출 범위에 포함됐다. 특히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백분위·수능 등급까지 유출된 대목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개인정보만 유출된 것도 아니었다. 기관 소속 교사·공무원의 이름과 나이스(NICD) 개인번호, 최초 임용일, 출장지, 호봉, 근무일수 등의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 학부모회 감사 결과, 학부모 연수 내용과 같은 학교 운영 관련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계속된 사이버 위협에 교육부는

탐지장비를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교육기관의 사이버위협 보안관제와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는 438개의 교육기관을 모니터링 중이다. 또 보안 안정성 관련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 효력이 만료된 기관 331곳에 대해선 장비 교체 작업을, 보안 시스템 미연동 기관 74곳에 대해선 탐지장비 신규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국 의원은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탐지장비 교체는 인증서 만료 후 최신버전으로 최대한 빨리 교체해야 하고 아직 미설치된 기관은 우선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등 확보에 더욱 노력해 탐지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사고를 두고 "국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유사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효정·김용재 기자**

## 문화일보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009면 사회

###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檢, 명재완에 사형 구형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 “어린이집 교원 권익 보호·보육 전념 환경 조성”

교육부, 보육활동 침해 대응책 마련  
내달 1일까지 전국 설명회 개최

정부가 어린이집 등 보육현장에서 잦은 갈등과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22일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나선 것은 최근 보육활동 방해하는 학부모 민원이 지나치게 늘어 보육교사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교육부가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47.5%가 직접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간접 경험까지 합치면 67.8%에 달

한다. 유형별로는 △보육활동 부당 간섭(47.7%)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34.2%) △부당 업무 강요(33.5%) 순으로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5월 수립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년)’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보육활동 침해의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어린이집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절차를 제시한다. 폭언·폭행, 반복적 민원, 무단 촬영·녹음, 명예훼손, 성희롱,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등이 침해 유형에 포함됐다.

대응 절차로는 원만한 대응과 원칙적 대응 등이 명시됐다. 피해 교직원이 직접 보호자와 면담해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단독 대응이 어려울 경우 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도록 했다.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교직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내부적으로는 원장과 운영위원회가 1차 조정애 나서고, 외부적으로는 법률·노무·심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전문상담·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 풀’이 핵심 역할을 한다. 아울러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 기관과도 연계해 피해 교직원이 신속하게 법적·심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6월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도 11월까지 보급한다. 이를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해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 ‘부총리’ 떼는 교육부, 조직개편 방향 주목

## 차관 보직 유지 최대 관심사 영유아정책실 신설도 무게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 제도가 폐지되면서 교육부 내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총리를 보좌하던 차관보 역할 변화는 물론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국·과장급 조직개편도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11년 만에 사회부총리 제도가 폐지를 앞두고 있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차관보직 유지 여부다. 교육부 차관보는 2019년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신설됐다. 차관보 산하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관리하는 사회정책협력관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추진을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두고 있다.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폐지되는 만큼 사회정책협력관 자리도 불필요해진다. 디지털교육기획관 또한 핵심 업무였던 AI 디지털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된 만큼 교원 연수,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의 업무는 책임교육정책실 등 기존 조직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일각에서는 차관보에 정책조정 기능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선임된 사례 등을 들어 온전한 교육부의 자리가 아니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때문에 교육부 내부에서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떼어내는 만큼 교육 관련 정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교육부 본부의 1급 자리는 대변인을 포함해 5개다. 하지만 실제 정책업무를 맡는 실장은 유·초·중등교육을 맡는 책임교육정책실과 대학 업무를 맡고 있는 인재정책실 등 2개에 그친다.

교육계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국정과제인 만큼 영유아정책실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 있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과 영유아정책국을 떼어내 영유아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의 관련 업무는 지난해부터 교육부로 넘어온 상황이 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경향신문

# 정책 난맥·컨트론타워 부재... 아직도 갈피 못 잡는 ‘교육’

고교학점제 등 정책 발표 하루 전 취소 반복... 교육부 장관 리더십 ‘도마’  
교육비서관 장기 공백에 어젠다 실종... “당정 교육 무관심 방증” 비판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초기부터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의대생 복귀 방안,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등 예고했던 주요 정책 발표가 하루 전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여당의 무관심에 교육 정책 컨트론타워 부재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 방안,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

표하려던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식이던 시기 발생한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취소와 달리 최고인 교육부 장관(사천)이 취임한 직후여서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번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장기화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발표 시점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제의식이다.

교육비서관 부재가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다는 해석도 있다. 내정실이 풀었던 이현 전 스키이애틀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선 선을 그은 이후 김용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허마평만 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 교육 어젠다”기를

대 10개 만들기’뿐만 상황에 더해 교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 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론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국교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급거부임을 전달한 의욕으로 사퇴한 이배용 전 위원장 체제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대통령 발언으로 다시 국교위

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차정인 선임 국교위원장은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연계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 A 씨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 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

계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정부·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 성취 수준 보장·출석률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진 기자 onjin@kyunghyang.com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 도입” “유치원 열릴때 유아학원 교습제한”

# 산으로 간 ‘4세-7세 고시’ 대책 토론

교육부-교원단체-국회 등 참석  
현장 고려없이 규제 아이디어만  
“수요 만족시킬 시스템 만들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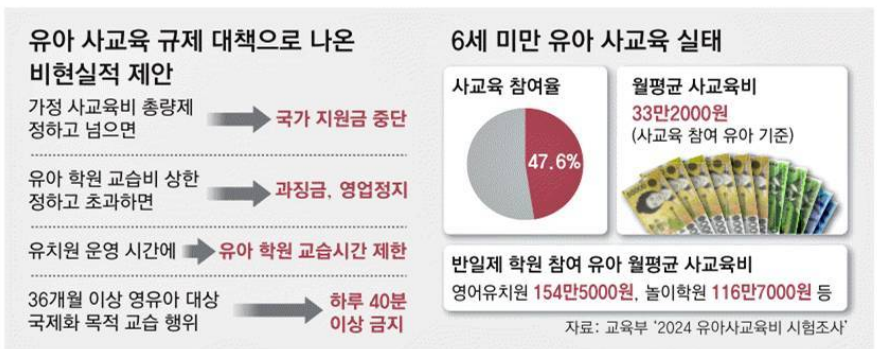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도입해 이를 초과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에게 육아 지원금을 끊거나, 유치원 운영 시간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학부모 수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아이디어만 나오는 실정이다.

### ●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까지 주장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정의 총 사교육비 상한을 정해 해당 비용을 초과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비, 육아 지원금 등을 제한하는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제안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 시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규과정 운영 시간대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발의된 ‘영어유치원 금지법’과 유사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 국제화 목적의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해당 목적의 교습을 하루 40분 이상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을 못 하게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과외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 ● 교육부 “공교육 혁신” 원론적 대책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유아 사교육 규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받아 든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입시 운영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과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에 그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교

육부는 전국 영어유치원 728개를 처음 전수 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시행 중인 곳이 23개로 파악됐다는 발표를 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영유아사교육 대책팀 담당자는 “아이들의 개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고 조기인식 교육의 잠재적 위험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내놨다.

유아 사교육 과열은 공교육 부실과 복잡한 대학 입시를 선행 학습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이다. 이를 때려잡는 식으로 통제하면 암시장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가 있어도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작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공교육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데,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해외 유학, 캠프, 과외가 늘며 교육이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 '7세 고시' 비판 방송에도 현장은 그대로... "되레 학원 문의 폭증"

"(7세 고시 실태를 비판적으로 다룬) 방송 이후 놀랍게도 어떤 학원에서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송에서 취재했던 학원에는 문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1년 전, KBS 시사 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편을 제작했던 상은지 PD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영유아 사교육 문제 토론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송 후 달라진 게 없다"며 이렇게 증언했다. '7세 고시'는 유명 영어수학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일곱 살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시험을 뜻한다. 최근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 탓에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변화는 보이

국회 영유아 사교육 규제 토론회 "학원 사업 교육세 걷어야" 지적 학원 측 "언론 부풀려 보도" 반발

지않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4세 고시(유명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와 7세 고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엄소용 연세대의대 연구교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 불안과 우울을 느끼고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여기는 부정적 자아가 생긴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대 미만 우울증 환자 수는 2020년 991

명에서 지난해 2,162명으로 2.2배로 늘었다. 학원에 세금 혜택을 주는 현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자 나선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현재 학원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데 공익 목적을 인정해 세금은 면제해 주면서 사교육은 없게 하자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며 "학원 사업에도 (부가세율인) 10%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도의 교육세를 거둘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고는 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영유아사교육대책'을 새로 만들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는 유아 사교육 자체를 제한하는 학

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규제 움직임에 학원 측은 반발한다. 이날 토론회에 찾아온 이상협 한국학원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영어유치원 규제 논의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교육부 조사 결과 전체 유아 영어학원 728곳 중 입학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뿐"이라며 언론 등이 상황을 부풀려 보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조사 결과는) 각 시도교육청이 관할 학원들에 입학시험 여부를 물어봐 '본다'고 응답한 경우만 확인한 것"이라며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대근 기자

## 이데일리

# '4세 고시' 영어유치원 논란... 정치권 "규제" vs 학원가 "학부모 선택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 규제를 놓고 정치권과 학원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국회는 영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규제 입법을 논의하고 교육 당국은 영유아 대상 사교육 대책을 마련할 임시 조치를 구했다. 반면 학원가는 이미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학원 교육의 여부는 학부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 놓고 정면충돌 "사회적 불평등 조장 문제 야기" 정부·국회, 규제 움직임 탄력 "학원 교육은 선택사항일 뿐" 연합회, 법안 철회 요청 등 반발

**정치권, 규제 논의 토론회**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당장 이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영유아 대상 학원 규제'의 필요성과 방안,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유아 학원은 아이들의 발달상 부작용뿐 아니라 부모의 대물림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조장 문제까지 야기한다"며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이라도 교육당국이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 시간에서도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 설정 △가정별 사교육비 총량제 △선별사업으로 정해진 학원에 부가세 부과 등 영유아 영어학원을 직접 때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실장은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하면 서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교육을 공교육 마비의 결과로만 해석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덕남 국회의원보좌사 처 교육문화팀장도 "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법적 권한을 활용해 영유아 대상 학원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규제조치도 필요한 만큼 교육부 역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계에서 거듭 거론되는 영어유치원은 원생 선발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며 '7세 고시' 논란을 부른 영어학원이다.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이 시험을 준비하는 '프린트'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학원)도 성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빨리 영어 조기교육을 시켜주겠다고 '4세 고시'를 보는 학원도 등장하고 있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이날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은 지난 7월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역시 적극적으로 뜻을 움직이고 있다.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산하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임시조직으로 스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스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스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영어유치원 관련 국회·교육부·학원가 현황**

<p><b>국회</b></p> <p>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영어유치원 금지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 제한</li> </ul> <p><b>교육부</b></p> <p>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산하에 '영유아 사교육대책팀' 신설 ※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임시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li> <li>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 업무</li> </ul>	<p><b>학원가</b></p> <p>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회 회장 반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사에 경정 유발하는 선별형 입학시험</li> <li>금지 조치 등 자정노력 교육당국과 대화 통해 학원 입장 관철 및 규제 방지</li> </ul>
---	--

정치권과 국회를 중심으로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에 관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아 당장 학원가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미 지난달 경정을 유발하는 선별형 입학시험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자정노력에도 영유아 영어학원이 여전히 입학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받지 않았으나 따로 참석하기도 했다. 발안 기회를 얻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이상협 전국외국어교육협회장은 "현 대통령이 규제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의 영어유치원 규제 논의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공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학원 교육은 선택 교육인 만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연합회 "규제 부담할 일할 것"**  
연합회는 '규제' 행동에도 나섰다. 국회에 법안 철회 요청서를 보냈고 지난 7월 말 '영유금지법 철회' 국민청원도 올렸다. 진선미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초청을

연합회는 교육당국과 대화를 통해 규제의 부담함을 주장하고 학원들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규제가 마련된다면 금지 조치 등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열 기자 keynews@

# 교육업계 AIDT 보릿고개, 수출·협업으로 넘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 채택 학교 반토막에 '각자도생'

비상, 3개국 사절단 초청해 홍보  
천재, 청소년센터 협약 등 돌파구

올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로 인해 AIDT 채택 학교 수가 1학기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 가운데 교육업계가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발행사들은 현재 채택한 학교 내 AIDT 교육자료의 안정적인 서비스에 집중하는 한편 수출을 적극 타진하거나 지역 청소년재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손해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교육은 교육 플랫폼 '올비아CL'과 한국어 교육 플랫폼 '마스타케이', 'AI 스피크 2.0' 등의 수출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 한국형 AI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든 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 본사에서 '아시아에듀테크썬데이'(AES)을 열어 미



비상교육은 지난 20일 과천 본사에서 미국·태국·아제르바이잔 3개국 교육 사절단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비상교육 제공

국과 태국, 아제르바이잔 3개국 교육 사절단 방문 행사를 갖고 K에듀테크 모델과 AI 시대 교육 혁신전략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AI 기반 교육 플랫폼 올비아CL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과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특허출원한 'AI 조교 에이전트'도 주목받았다. AI 조교 에이전트는 선생님 강의 내용을 학습해 선생님 대신 질

문에 대답하는 것은 물론 역질문과 학습 동영상 추천도 가능하다.

천재교육은 최근 과천시청소년재단 학교박 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서비스 기획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는 한편 프로젝트기반학습(PBL) 직무 체험으로 이어지는 교육 콘텐츠로 현장 밀착형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천재교육은 대만 룡팅출판사 관계자들과 AIDT 교육자료 전략에 대한 심층 교류 행사를 갖는 등 수출을 적극 추진했다. 이밖에 동아출판과 아이스크림미디어 등 다른 교과서 업체들도 국내 서비스 안정화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2학기 AIDT 교육 자료를 신청한 학교는 지난 11일 기준 총 2095개교로 전체의 19%를 기록했다. 지난 1학기(37%)의 절반 수준이다.

김혜미 기자 pinnster@

# 새로운 공부보다는 실수 줄이는 것이 핵심

## 수능 D-50 학습 전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점에는 수시 대학 원서 접수가 끝났고, 10월의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풀릴 수 있다. 한편으로는 오르지 않는 성적과 빠르게 흘러가듯 하는 시간 때문에 마음만 조급할 수 있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헤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능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음을 다잡고 수능시험 마무리 학습 전략을 잘 세워 실천한다면 지금의 실력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50일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영역별 학습 진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뒤돌아보면 어느 정도의 약점은 보완할 수 있다"며 "또 실전 대비 문제풀이 등을 병행해 자신의 약점을 확실하게 보완하면 적어도 10점 정도는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수능시험 마무리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을 토대로 정리했다.

### 수능 최저 충족이나, 정시 지원이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이유와 목표에 따라 학습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한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을 맞추는 것이 목표라면, 등급 합을 맞추기 위한 최적의 영역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수능 영역을 나열하고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목표 등급을 충족할 수 있는 과목에 마무리 학습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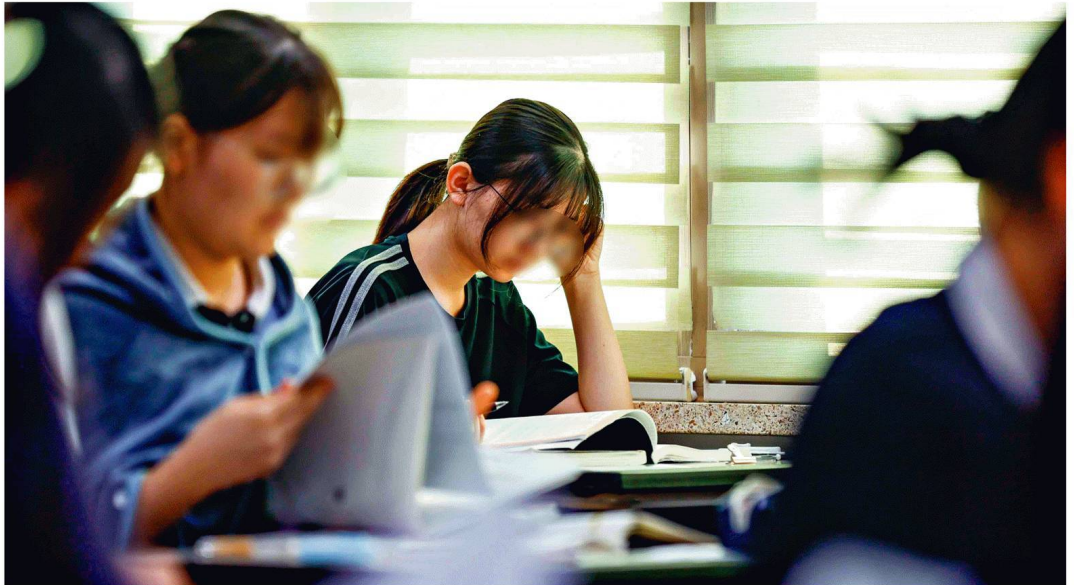
이치우 소장은 "등급 충족에 무관한 영역은 과감히 내려놓거나 학습시간을 최소화하고 선택한 영역만 챙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특정 영역 미집 중점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 합을 맞추는 수능 최적의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정시로 목표 대학 진학을 설정한 경우에는 영역별 성적을 극대화해야 한다. 학습시간 대비 점수 향상이 가장 좋은 영역 위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를 최고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서 등급을 한 등급 더 올릴 것인지, 탐구 영역 두 과목에서 표준점수를 최대한 올릴 것인지, 국어와 수학 중에서 성적 향상이 높은 영역을 비교해 보고, 집중 영역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연철 소장은 "수능 D-50 시험은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 학습의 틀을 다잡고 약점을 보완하는 시기다. 모의평가나 기출문제 풀이 결과 등을 통해 취약 영역을 점검하고, 한두 과목이라도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특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습 점검과 계획 세우기

학습 면에서는 기존에 공부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확실한 점검도 필요하다. 평소 자신 있다고 여겼던 과목이나 단원일수록 방심하기 쉽고, 정작 수능에서 기본 문제조차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나 영어는 정답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며 해설을 확인하는 습관을, 수학은 풀이 과정의 논리성을 점검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틀렸던 문제는 난이도와 풀이 시간을 고려해 다시 풀고, 오답을



지난해 9월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 수능최저 충족? VS 수능 점수 향상?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 취약점 보완 한두 과목이라도 성적 향상에 집중 기출·모평 문제 시간내 푸는 연습도 시험 전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해야

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것저것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계획을 토대로 나만의 학습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취약점 보완에 집중할 것

올해 실시한 6월, 9월 모의평가와 더불어 기출문제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동일하다. 이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수능 준비의 핵심이다. 김병진 소장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오 답안 정리와 문제 유형 분석은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틀린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비교하면서 특정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실수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에서 틀렸는지 확인하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수능에서 더 어렵거나 예지치 않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모든 유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과목별 약점과 문제 유형에 대한 개념을 보완하는 학습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심화 문제가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추가로 풀이하며, 개념 이해도를 점검해야 한다. 올해 모의평가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 유형이나 고난도 문제를 따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유형별·과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은 50일 동안 보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

김병진 소장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나 사시 모의고사를 실제 수능과 동일한 조건에서 풀어보며 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며 "철저한 오답 정리와 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수능 당일까지 최상의 준비를 다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학습의 많은 시간을 문제 풀이 위주의 실전 마무리 학습으로 전향하는 수험생이 점점 늘어난다. 따라서 수능시험 D-50일 동안은 EBS 연계 교재와 그동안 보아온 수능 모의평가와 기출 문제 등을 다시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점수 확인 후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을 묶어서 해당 유형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답노트 활용하면 도움

이 시기에는 그동안 작성해 온 오답 노트나 정리 노트 등을 보며 오답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실제 수능에서 틀리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학습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유성룡 소장은 "문제를 풀 때 어렵거나 기억이 나는데 공식이 떠오르지 않거나, 또는 정확한 개념 정의가 생각나지 않거나, 스스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오답노트가 없다고 해서 지금 시험에서 굳이 별도의 노트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출 및 모의평가 문제집을 활용하면 된다. 먼저 시험지를 영역별로 구분해 최근 시험부터 과거 순서대로 정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답노트가 된다. 영역별 월별 시

험지를 넘기면서 문항별로 4가지 '알름(알고 틀린 문제), 알맞(알고 맞힌 문제), 모름(모르고 틀린 문제), 모름(모르고 맞힌 문제)' 기준 가운데 하나를 표시한다. 그 다음 영역별로 정리된 시험지를 한 장씩 차례대로 넘기면서 '알름'과 '모름' 문항 위주로 보충학습을 해 나간다면 효율적인 마무리 학습 노트가 될 수 있다.

이치우 소장은 "모름' 문항이 많은 경우에는 영역별 기초 개념이 약하다고 봐야 하므로 실전문제 풀이보다는 세부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의 기초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모름' 문항과 '모름' 문항이 모두 많다면 기본 개념 정리가 필요하지만, 그 외 경우에는 '모름' 문항 중에서 완전히 모르는 문항과 일부는 알고 있는 문항을 구분해서 적지 않고 해당 문항을 풀 수 있도록 부족한 개념, 원리 등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의 컨디션 유지해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생활 패턴을 수능 시간표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수험생이 수능 당일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능은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므로 일상에서부터 관련 습관을 미리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능 첫 시험일 국어 영역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하므로 이보다 약 2시간 전인 6시30분에서 7시 사이에 기상해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그에 맞춰 취침 시간을 조정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모의고사를 풀 때도 시간표에 맞춰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정 과목만 모의고사를 푼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 해당 영역 시간에 문제 풀이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이렇게 시간대에 맞춰 연습하면 수능 당일에도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 실력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력 관리하는 수능이 다가올수록 더욱 신경써야 한다. 수능을 앞두고는 규칙적인 생활과 식단 관리를 통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병진 소장은 "실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의고사 풀이를 함께 OMR 정답 마킹 연습을 해보며, 시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시간을 엄수하며, 연습을 반복하면 문제를 푸는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진 기자 Kimmy@hani.co.kr



지난해 서울 관공구 세종대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5수능 입시 지향전략 특집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이 배지표를 비롯한 입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겨레자료

## 중국인에 미국 수어 가르치는 한국 농인 교사

허세영 교사 6년째 대구대서 수업  
“새로운 세계, 학생들과 나누고파”

“미국 수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대구대 경산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만난 허세영(40) 교사의 말이다. 그는 농인(청각장애)으로 인해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국립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17년 차 특수교사다. 6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 연차를 내고 대구대에서 ‘미국 수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 교사는 이날 수업 시작과 함께 한국어로 “1층 화장실”이라고 쓴 뒤, 검지로 1을 만들어 한 바퀴 돌리고 양 손바닥을 펴서 아래로 보게 모았다가 벌렸다. 미국 수어로 ‘1층’을 표현한 것이다.

미국 수어와 한국 수어의 차이에 대



농인인 허세영 교사가 대구대 학생 26명에게 ‘미국 수화’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 대구대]

해 허 교사는 “한국 수어는 도상성이 강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미국 수어는 손을 이용해 알파벳을 만들다 보니 철자를 맞추듯 의미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 수어로 ‘사랑합니다’를 표현하려면 한 손을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을 손가락을 편 채로 주먹 위에 얹어놓고 돌려주는 정해진 동작을 한다. 반면 미국 수어는 주먹을 쥐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펴서, ‘I Love You’의 알파벳 I와 L과 Y를 한 번에 나타낸다.

이날 수강자 중에는 중국인 유학생도 있었다. 허 교사는 이들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한국어-중국어 번역기를 띄우고 수업을 진행했다. 중국 유학생 이항철(李杭哲·24)씨는 “한국 수어를 배우기 위해 대구대에 왔는데 미국 수어까지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4살 때 고열로 청신경이 손상된 허 교사는 대구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8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특수교육학과 언어·청각장애아교육전공)을 마치며 특수교육 분야 ‘국내 농인 1호 박사’가 됐다. 미국 수어는 학부 때 농아인협회 지인의 소개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선생님을 만나 처음 접했다고 한다. 허 교사는 “대구대에서 수어 통역사, 대필, 노트북 등 많은 지원을 받았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받은 걸 돌려주고 싶다”며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 검찰 '대전 초등생 살해' 전 교사에 사형 구형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

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

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 검 "반성 않고 유족측 엄벌 원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을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양의 유족이 엄벌을 원할 뿐 아니라 명씨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폭력성을 표출하던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

며 범행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고인이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인 만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며칠 전에는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 檢,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사형 구형

“명재완, 반성 기미 전혀 없어”

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사진)에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심리로 열린 명재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피해 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재완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됐다. 검찰은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명재완은 병가 휴직 후 조기 복직할 정도로 정상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12월2일 정신과 의사에게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진단서를 받아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같은

의사에게 ‘증상이 거의 없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조기 복직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명재완은 최종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 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檢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 죄가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명재완 측이 요구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는 명재완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명재완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최두선 기자

# 아동유괴 5년새 48% 급증 전문가 “체험형 교육 필요”

범행동기 ‘성범죄·경제적 목적’  
대검, 유괴사범 엄정 대응 지시

최근 아동유괴를 시도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아동 대상 유괴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아동 유괴범죄의 주된 동기를 성적, 경제적 목적으로 분석했다. 아동 대상 체험교육 개발 등 실효성 갖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범죄는 2019년 138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48% 급증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여아였다.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해당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생한 범죄가 잦았다.

전문가들은 유괴범죄의 동기로 △성범죄 목적 △경제적 목적 △왜곡된 성취감 및 통제욕구 △범행 성공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돈을 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금은 CCTV(폐쇄회로 TV)가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순간적이다. 대부분 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 촬영 등 아동 자체가 목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목적도 주요 동기로 지목됐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추세변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등도 유괴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적인 이유가 여전히 제일 크

다”고 했다.

피해아동의 절반 이상이 여아인 점은 범행 성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부분 동기가 성적 목적이며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통제욕구가 그 원인”이라며 “성인에 대해서는 이런 접근을 했을 때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 유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민관이 협력하고 교육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웅혁 교수는 “경찰관 5만5000여명이 상시로 예방활동에 투입되긴 어렵다”며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아이들이 참여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동유괴 미수사건이 발생하는 데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유괴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범죄와 모방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검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전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토록 했다. 또 유괴사범의 여죄 수사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엄벌기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박진호·양윤우 기자 zzino@

# “취업 준비 위해 졸업 미뤄요” 3년 새 60% 늘어

### 대학 15곳 졸업 유예생 1만명 육박 졸업하고 취업 전까지 사실상 백수 부담 느낀 학생들 재학생 신분 선택

연세대 경영학과 4학년 이모(24)씨는 지난 1학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채워 지난달 졸업할 수 있었지만, 한 학기 ‘졸업 유예’를 신청했다. 지난달부터 기업 15곳에 지원서를 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올해 안으로 합격하기 힘들 것 같아서다. 기업에서 1~2명씩 뽑는 자리에 1000명 넘게 지원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씨는 “취업까지 적어도 1년은 걸릴 게 뻔한데, 면접관이 졸업하고 뭐 했는지 물어보면 ‘취업 준비했다’고 답할 수 없어서 졸업을 유예했다”고 했다. 이씨는 하루 종일 자기소개서를 쓰고, 경제 분야 기사를 읽으면서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이씨처럼 졸업을 미루고 대학에 남아



있는 ‘졸업 유예생’들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학교에 적을 걸어둔 채 취업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거점 국립대 9곳과 서울 주요 사립대 6

곳의 올해 졸업 유예생은 지난 17일 기준 총 9857명이었다. 2022년 6215명에서 3년 만에 59% 늘었다. ‘졸업 유예 제도’는 학점 등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춘 학생들이 졸업을 미룰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 정식 명칭은 ‘학사 학위 취득 유예제’다. 대학이 졸업 유예를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는 졸업 유예생에게 학점 이수를 의무화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018년 통과시켰다. 이후 대학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학생이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대체로 시설 사용료 정도만 받는다.

올해 서울 주요 사립대 가운데 한양대 졸업 유예생이 173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중앙대(1437명), 이화여대(1227명), 서강대(812명), 고려대(637명) 등이었다. 연세대는 1학기만 559명이었다. 거점 국립대 중에선 경북대가 9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는 3년 새 졸업

유예생이 두 배로 뛰었다. 그 밖에 전남대(642명), 부산대(589명) 등도 졸업 유예생이 많았다. 거점 국립대 8곳(제주대 제외)이 학생들에게 시설 사용료 등으로 받은 졸업 유예금은 올해 총 4억7163만 원이었다.

졸업 유예생들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은 ‘취업 한파’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신규 채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인 이상 기업 500곳 중 60.8%만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입 사원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기업이 많은 것도 대학생들이 취업난을 겪는 큰 이유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창 일해야 할 젊은 인재들이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는 건 사회적으로 큰 낭비”라며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오주비 기자

# “20년 공부해 먹고사는 시대 끝나 평생 배우는 학습 능력 키워줘야”

강준호 서울대 사범대학장 인터뷰  
내년 1학기 ‘학습과학’ 전공 신설  
타 대학서 뇌공학 교수까지 영입

내년 3월 서울대 사범대학에 ‘학습과학’이라는 전공이 생긴다. ‘수학교육’ ‘과학교육’ 등 기존 15개 학과에 전공 1개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과학을 가르칠 뇌공학 전공 교수까지 영입했다. 교육계에선 “내년에 80주년을 맞는 서울대 사범대가 개원 수준의 변화를 맞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체 ‘학습과학’이 뭐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 ‘학습과학’ 전공은 다른 학과와 달리 교사 자격증이 안 나온다. ‘교사 양성 기관’인 사범대가 왜 교사 아닌 인력을 배출하는 것일까.

‘학습과학’ 전공 신설을 추진한 서울대 강준호(사진) 사범대학장은 지난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인간의 정체성까지 도전받는 AI 시대에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학습과학’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인간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이다. 전통 교육학이 교사 입장에서 교육 현상을 탐구했다면, 학습과학은 모든 게 학습자 관점이라는 게 큰 차이이다. 학생들은 학습이 두뇌, 감정, 신체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배우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법을 배운다. 인공지능, 데이터과학도 배운다. 해외에선 스탠퍼드대, 카네기멜런대 등 컴퓨터공학, 뇌과학이 강한 대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 이런 내용을 왜 사범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나.

“AI 시대 교육의 패러다임을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예비 교사와 교육 분야 종사자부터 바뀌어야 한다. 과거엔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잘 전달 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지식은 ‘챗GPT’가 더 잘 안다. 교사는 더 이상 지식만 전달해선 안 되고, 학생들이 평생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가 ‘학습과학’을 알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학습자가 잘 배우는지, 필요한 환경이 뭔지 등을 알아야 도울 수 있다.”



황경식 기자

## 학습과학(Learning Sciences)

인간이 어떻게 배우는지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 교육학, 인지과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을 아우르는 융합 학문 분야다.

- 뇌공학자인 고려대 민병경 교수를 영입했다던데.

“학습은 뇌 신경세포의 연결망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결국 뇌를 바꾸는 게 교육이다. 교육 종사자가 학습자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건 이상한 일 아닌가.”

- 사범대 졸업생이 교사 자격증을 안 받는 건 이례적이다.

“사범대가 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전문가를 키우는 곳으로 정체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더 이상 유·초·중·고 20년 배운 것으로 평생 먹고사는 시대가 아니다. 기업 인사 분야 등 학교 밖 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임직원이 계속 성장해야 기업도 성장하지 않나. 학습과학은 이런 다양한 수요에 꼭 필요한 학문이다.”

- 전공 개설에 3년이나 걸린 이유는.

“2023년 초 논의를 시작해 사범대 내부 의견을 모으는 데 1년 반, 본부 승인을 받는 데 1년 걸렸다. 전공과 운영 방식 모두 생소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오래 걸렸다.”

- AI 시대, 교육의 변화가 너무 더디다.

“장기적 안목의 국가 교육 전략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교육은 손대봐야 논란만 커지니 누구도 책임지고 안 나선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인구 절벽과 AI 혁명이다. 둘 다 교육으로 돌파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것 모두 교육이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만 맡겨 놓으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김연주·최인준 기자

東亞日報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H16면

지방

## 통합 추진 목포대-순천대 학교명 추천 공모전 진행

내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응모

국립대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대학의 새로운 이름을 찾는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통합 추진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대학은 지난해 11월 대학통합 추진에 공식 합의했으며 현재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수정 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공모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 국민 누구나 양 대학 홈페이지(mokpo.ac.kr 및 scnu.ac.kr)에 안내된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각 대학 구성원은 '별도 구글폼'(순천대) 또는 '대학 자체 모바일 플랫폼 시스템'(목포대)을 통해서 응모가 가능하다.

제안된 교명은 △내부 구성원 공모안 △전 국민 공모안 △외부 전문가 컨설팅 추천안으로 나눠 심사한다. 내부 공모안은 각 대학이 구성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자체 심사하고, 전 국민 공모안과 외부 전문가 추천안은 양 대학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 심사 방식으로 평가한다. 심사 기준은 △통합 상징성 △독창성 △활용성 △전달성 등이며 상표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있는 명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상 규모는 부문별로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50만 원) △우수상 3명(각 20만 원)이며 추첨을 통해 다수의 참가자에게 기프트콘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교육세 인상분, 가산금리에 절반만 반영 추진

법안에 못박지 않고 '그림자 규제' 은행권 "돈 빌린 고객이 부담해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인상되는 교육세를 은행이 소비자와 반반 나누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은행이 교육세를 절반만 가산금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반영 비중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못 박기 보단 가산금리가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교육세를 과도하게 전가하는지 살펴야겠다"고 말했다. 별도 정부안을 내지 않고 사실상 '그림자 규제'를 하겠다 것이다.

앞서 정부는 연간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사·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규모는 지난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은행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교육세를 자율적으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여당에서는 교육세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가 철회한 상태다. 교육세 인상분만큼 가산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은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는 돈을 빌린 고객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다. 절반만 반영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하한상향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기임에도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신규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금리는 지난 5월 3.94%, 6월 4.02%, 7월 4.06% 등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였다. 분할상환식 주담대에 대한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6월 2.27~3.48%에서 7월 2.31~3.51%로 상·하단이 모두 높아졌다. 황인주기자

# 교육세·과징금 부담 급증 금융研, 은행 건전성 경고

“상반기 최대실적은 일회성”  
연말 이후 재무 리스크 산적

금융권을 겨냥한 거액의 과징금과 교육세 부담 등으로 국내 은행의 하반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각종 재무 부담 요인이 가중되며 올 상반기 기록했던 은행권의 역대 최대 순이익(14조9000억원)이 ‘일회성 실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국내 은행의 상반기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이후 불리한 영업환경과 각종 과징금 리스크가 겹쳐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은 교육세율 인상이다. 정부는 금융회사 수익금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 0.5%를 부과하던 교육세율을 1.0%로 2배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국회 통과가 확정되면 내년 부터 시중은행별로 1000억원씩 금융권을 통틀어 연간 1조3000억원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약 7500건의 주택담보대출비율

국내 은행 하반기 건전성 리스크

- ▶ LTV 담합 과징금 1조~2조원 추산
- ▶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2조~8조원 전망
- ▶ 교육세율 인상 연 1조3000억원 세금 부담
- ▶ 금리 인하·불경기로 순이자마진(NIM) 감소
- ▶ 예보한도 상향에 제2금융권으로 자금 이탈

※ 자료=한국금융연구원

(LTV) 자료를 수년간 공유하며 사실상 대출 한도를 담합했다고 판단해 1조~2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과징금도 2조~8조원 선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상황도 비호의적이다. 금융연구원은 이자자산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시장금리 하락, 불경기 등으로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기록한 최대 당기순이익에 대해선 “환율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가, 지난해 ELS 배상금 등 일회성 비용 지출에 따른 기저 효과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대출 자산의 건전성 관리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훈 기자

##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 큰 걸음 뗐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한국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9년 만에 하락을 멈췄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멈추지 말고 고삐를 당겨 추세전환을 굳혀야 할 때다.

때마침 정부는 올해 7월부터 5세 아동 1인당 월 최대 11만원까지 유아교육·보육비를 추가 지원해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만 3~5세 대상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0~5세를 아우르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지원에 올해 보다 8331억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행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도 맞물려, 영유아 부모와 미래 영유아 부모가 될 청년세대에게 공동체 지속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약속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특히 만 5세 아동 1인당 유아교육·보육비 추가 지원은 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 만 5세 아동 27만8000명으로,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이란 점에서 학부모들에게 매우 환영받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선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지원책이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계별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현장

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만 5세, 2026년 만 4~5세, 2027년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 실행을 위한 추가 지원은 생애 출발선 평등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하는 큰 걸음의 시작이다.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우리 영유아들이 소중한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수준 높은 인프라 구축 운영 지원은 물론,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정책 등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모, 영유아교사, 지역사회,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각자도생을 넘어 ‘함께 생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영유아는 현재도 미래도 우리 사회의 중심이어야 한다.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존속할 수 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몇 가지 성공 조건

## 시론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



최고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식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 정책이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에 취임했는데 교육부 수장은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공석이었다.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초 지명자가 낙마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지난 정부의 사회부총리 공석 기간(57일)보다 훨씬 길었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을 52자(한 문단)에 담았다. 대학과 관련된 내용은 구조 개혁과 관련된 한 문단이 더 있을 뿐이었다. 교육감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초·중등 교육에 1614자(24 문단)를 배정한 것과 사뭇 비교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교육 공약 중에 대학 공약이 8분의 1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도 비중이 작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9개 지방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2026년도 예산으로 배정된 9000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미 지난달 말에 이구동성으로 호소한 뒤라 최 부총리의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의구심이 생긴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전국의 학생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과도한 경쟁 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란 지역에서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수준의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만들 생각은 있지만 정작 만들어진 서울대를 해당 지역의 학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보인다.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입학 당시 서울대 수준 또는 최소한 그만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으로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숙제다.

최 부총리의 취임사대로라면 일단 우수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들이 자란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진학을 희망할 때 가고 싶은 대학이 거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지방 고교들이 보여준 현실은 최 부총



### 우수 학생 충원할 대책 안 보여 지방에 머물 정주 유인책 필요 광역시가 교육중심지 역할 해야

리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2025년도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30개 고교를 보면 비수도권 고교는 6개 뿐이었다. 자율형사립고 3개(전국단위모집 2개, 광역단위모집 1개), 외국어고 2개, 과학고 1개였다. 일반고교는 한 곳도 없었다. 6개 비수도권 고교가 속해 있는 곳은 광역시 2개, 도 단위가 4개였다.

50대 이상 세대의 기억에 익숙한 이름의 고교들이 여전히 리스트에 들어 있는 경우는 주로 서울 소재 학교들이다. 비평준화 시절인 70대 이상 세대가 기억하는 소위 명문 고교로 남아 있는 학교들은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의 우수 학교들은 이름부터 낮은 경우가 많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화 시대에 많았던 지방 중소도시의 전통적 명문 고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대로라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노력이 성공해 지역에 서울대가 9개 더 생기면, 새로운 서울대는 수도권 학생들이 진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역의 대를 선발하기 전까지 벌어진 양상을 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하고 대학 진학 때까지 지역에 남아있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지 수도권 학생들이 고교 진학 이전에 지역으로 이주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거주자가 주중에도 거주하는 지방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명문 고교를 육성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전국의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광역시를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해 메가시티의 교육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 부총리 말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는 곳’ 말이다. 서울 및 수도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거꾸로 기울여 수도권과 지방이 평평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새로 만드는 서울대 9개’가 인적이 드문 들판에 들어선 지방의 고속철도 역처럼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코미디 같은 현상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최 부총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혁신 정책에 성공하려면 세종 교육감 시절과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양승훈의 인턴페이지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다수의 사립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에 출간된 책이다. 저자는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에 서울대에 비견할 수준의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자고 한다. 서울대가 10개 생겨나면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향한 극한적인 경쟁 압력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체제를 벤치마킹해 거점국립대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학계의 대학개혁론 중 하나였던 '국립대학 네트워크' 논의를 '서울대 10개'라는 선명한 구호로 엮어냈다.

### 사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정책의 상징이 됐고, '5극3특'이라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짝이 잘 맞았다. 권역의 혁신을 거점국립대가 이끌 것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거점국립대 2개-대학병원 1개-국책연구기관 1개-산업클러스터 1개를 여자는 제안할 수도 있다. 초광역화, 혁신클러스터,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는 완전한 생태계처럼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어도 좋다.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다. 그런데 살펴봐야 할 현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잡다단하다. 전체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는 고작 15%이고, 4년제 대학으로 범주를 좁혀도 국공립대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0%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010년대를 경유하며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사립대들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 결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태로 보충되나, 상당 금액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으로 지정되는 상황이다.

사립대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평가에서 이른바 3대 지표(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에 얽매는 상황은 크게 변함이 없다. 정권에 따라 교육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방 사립대들은 지표를 깎아먹는 학교들을 모집 중지를 통해 폐교하는 방향을 잡았다.

인문학과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이 축소되는 것은 차치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주도 혁신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모두 다 알고 있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가운데 기초학문이라 볼 수 있는 자연계열 학과들이 더 빠르게 축소되었다.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위해 자연과학은 필요하지만, 개별 사립대 관점에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고정비(설비 투자 및 교원 임용의 어려움)는 많이 들고 수익(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 재정이 탄탄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비용 절감' 노선을 택하기 쉽다. 지방 사립대들이 최근 10년간 전문대 학과들을 늘려온 것도 같은 판단에서 나온 의사결정이라 볼 수 있다.

### 꼬여 있는 대학체제의 매듭 풀어야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 문제는 제조업으로 치면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관계와 유사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소부장 기업 생태계가 건전

하게 형성되어야 실제로 혁신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학술장에서 '연구'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점국립대가 작동하려면, 지방 사립대가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건전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와 사립대 간 기능 분업에 대해 둔감하다. 연구자로서 각급 대학 교원들의 역할과 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둔감하다. 서울대 10개를 통한 지역 대학 연구생태계의 낙수효과를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배경이 최상위권 입시의 잔혹함이라는 점을 보면 승자독식의 구조가 지역에서만 멈출리는 없다.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친다. 선진국 가운데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에서 국가의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의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존에 꼬여 있던 대학체제의 매듭을 풀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칼에 잘리지 않을 문제이므로 더 많은 목소리를 청취하길 바란다.

# 학폭 대입 반영이 역효과 내지 않으려면

이재성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대학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일부 대학은 2호 조치부터 서류 평가 총점을 0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언뜻 보기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가해학생 조치가 대입에서 결격 사유로 반영되면 심의위원들이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고 느낀다. 예컨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의 학급 교체나 전학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위원들은 '이 결정이 가해학생의 앞길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닐까'하는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가해학생의 미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을 해당 지

역 학부모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지역 학부모 입장에서 다른 학부모의 자녀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교육지원청 역시 적극적인 처분을 꺼릴 수밖에 없다. 가해학생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교육지원청은 소송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 회피 구조'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조치 결정 통보서도 교육장 명의로 작성되며, 통보서에는 어떤 심의위원이 어떤 근거로 찬성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학폭위 회의록 또한 간사가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논의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심의 과정에서 "조치가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점수를 1점씩만 낮추자"는 식의 비합리적 의견이 나오더라도, 위원별 발언 내용은 법상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피해학생 보호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근본적으로 가해학생 조치와 대입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제

도적 방향이 정해진 것이라면,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책임 구조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 개개인이 내린 결정과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학폭위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구조이므로, 사실관계 인정, 학폭 해당 여부, 판정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위원 스스로가 직접 '조치 결정 요청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피해학생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데도 화해 정도를 '높음'(1점)으로 평가한 위원이 있다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간사가 아니라 그 위원이 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 직접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별 위원들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논증이 어려운 비합리적 의견은 자연스럽게 배척될 수 있을 것이다.

학폭 문제 해결의 핵심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교육적 목적에 있다. 대입 연계라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한 이상, 그 무게만큼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를 지키는 힘은 제도의 엄격함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 모두가 반장이 되어보는 교실 민주주의



**이지민**  
내부재보실천운동 상임고문

“반장 선거를 나갔던 기억이 없네요. 당시엔 교사가 마음대로 지목했어요.” 지난 9월4일, 대통령실에 초청된 한 어린이가 “대통령님은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보신 적 있으시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 1964년생인 대통령보다 네 살 아래인 나 역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담임이 지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드물게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드라마<폭삭속았수다>속 장면처럼 담임의 뜻에 따라 1등이 아닌 아이가 반장이 되기도 했던 시절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서야 비로소 투표로 반장을 뽑았고, 당시에는 성적 상위권 학생만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신학기가 시작된 9월, 교실마다 학급 임원 선거가 이어졌다. 라디오에는 “아들이 반장에 당선돼 아이보다 내가 더 뿌듯하다”는 부모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몇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학급 선거는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 속에서 대표를 뽑아보는 경험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 능력을 기르

게 되죠. 성인이 되어서도 후보자의 됴됨이를 보고 선택하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담임 지명에서 벗어나 투표를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분명 민주주의 교육의 한 걸음이다.

하지만 현실의 교실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 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아이가 2~3년 전 겪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 봐도 그렇다. 같은 학원이나 유치원 출신이라는 연고, 외모 이미지가 표심을 흔들기도 했다. “당선되면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이 등장했고, 어떤 아이는 햄버거와 피자를 돌리기도 했다. 특히 서울강남권에서는 아예 ‘반장 선거 준비 학원’까지 운영되며 연설문 작성, 공약 설계, 표 받는 요령을 코치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훈련장이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임원을 맡는 학생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다. 대다수 학생은 투표만 하는데 그치고, 직접 대표를 맡아보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일회성 투표 경험에만 머물고, 학생들은 주권자라기보다 수동적인 역할로 남는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로만 배우게 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역시 좁아질 수 있다.

요즘 학급 규모는 3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반장과 부반장이 맡는 역할도 제한적이고, 교실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분리수거·급식 봉사 같은 당번 활동이다. 그렇다면 당번을

‘반장’으로 삼아 일주일씩 돌아가며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취지에 맞다. 반장은 감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봉사라는 점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이 고르게 책임을 맡아보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학급 단위 임원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 전교대표는 학생회를 통해 선출하지만, 교실 안에서는 필요한 일을 당번제로 분담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학급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학생이 직책을 독점하는 대신,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 맡는 경험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선이다.

교실은 작은 사회다. 교실에서 경험한 책임과 봉사가 훗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민주주의는 직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짚어낸 책임 속에서 자란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뿌리내린다. 학생들이 이 가치를 공유하며 자랄 때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일상이 된다.

국민주권을 내세운 정부라면, 교실을 진정한 ‘민주주의 훈련장’으로 바꾸는 변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작은 교실의 변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지역사회 참여활동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다

교실 속 세계, 세계 속 교실

“2025년 4월1일 박종철 열사의 생일을 맞아 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박종철 열사가 꿈꿨던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경문고 학생들이 기억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실천 해주기 바랍니다.”

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박동호 신부께서 경문고 민주시민 실천동아리 키비처에 장학금을 수여하며 한 말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박종철 열사가 꿈꿨던 세상과 민주주의라는 무게 때문에 장학금을 감히 함부로(?) 쓸 수 없었다. 고민 끝에 키비처 회원들은 박종철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국가폭력’이라는 주제로 제주 4.3, 광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알리는 평화교육 실천 활동에 장학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첫 활동은 4월3일 ‘4.3 희생자 추념일’에 펼침막을 게시하는 것이었다. 올해 77주기 추념식에 게시될 문구를 정하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에 요청해 제주 4.3평화공원에 펼침막을 게시했다.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들이 4.3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자, 제주도민사회도 청소년들의 평화실천 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제주지역 신문에 실린 추념식 관련 기사에 우리의 사진을 실어주었다.

이에 우리도 제주도민과 연대하는 평화실천 활동으로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안장된 인물 중 제주 4.3과 관련된 분들의 삶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더 나아가 제주 4.3사건 당시 집단학살 참화를 막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김



경문고 민주시민 실천동아리 키비처 회원들이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 내용을 담은 조형물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박범철 교사 제공

익열(1921~1988)장군 추모 활동도 진행했다.

5월15일 스승의 날에는 창체시간을 활용해 1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울국립현충원을 방문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찾는 활동을 펼쳤다. 6월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는 빨간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서울 관악구 박종철센터를 방문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 이인(die-in)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빨간 복장은 시리아 내전 당시 피난 도중 사망한 난민 아이, 아일란 쿠르디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와 세계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기획했다.

올해 진행한 활동 결과물은 11월3일 제96회 학생의 날에 동작관악지역 학생자치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2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학교 인근 흑석동에 있는 학도의용병현충비 옆에 17살 학도병으로 1950년 한국전쟁에 참

전해 전사한 고 이우근의 ‘부치지 못한 편지’ 내용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교육감 선거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는 만 16살 이상이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살 이상이면 피선거권까지 갖는다. 이렇듯 제도상으로는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됐지만, 교실에서 이뤄지는 민주 시민 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우리 지역과 사회 현안들을 직접 접해보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청원운동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해나간다면 학생들의 민주시민 감수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가정과 학교 활동이 더욱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박범철 경문고 교사  
세계시민교육연구소 교사팀장



# 자녀의 진로 선택에서 AI의 역할

## AI시대 자녀 교육법



우리 아이는 커서 뭐가 될까? 이 질문에 대답하자면, 아이들은 부모의 직업을 따라갈 확률이 아주 높다. 이 현상을 직업 세습(Occupational Heritability)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부모가 선택한 직업 정보가 많고,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직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다면 그 직업에 적합한 적성을 아이들에게 물려줬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는 부모와 같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다른 직업들에 비해 수십배로 높아진다. 의사 외에도 농업 종사자(토지 및 기술의 직접적인 세습), 배관공·전기공·정비사 등 숙련 기술직(사업 승계나 도제식 훈련을 통한 기술 및 고객 관계 전수), 자영업자 및 기업가(위험 감수 성향 및 사업 노하우 전이), 군인들이 높은 직업 세습률을 보인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의 직업 선택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때 AI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자녀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알아보고,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최선의 길을 연결해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다. 나 역시 자녀가 운동, 악기, 외국어 등 여러 분야를 경험하도록 노력했지만, 열 살이 넘은 아이들의 선택은 결국 IT였다. 개인적으로 테크 쪽보다는 언어를 비롯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기를 원했지만, 아이들은 관심이 없었다. 최소한의 교양서라도 읽혀보려 하면, 아이들은 프로그래밍 책을 선택했다. 남편 유전자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 모두 테크 종사자이다 보니 관련 직종의 커리큘럼을 뽑기는 쉬웠다. 부모가 쌓아온

정보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AI시대엔 어떨까? 테크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도 우리처럼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AI가 가져온 혁명으로, 부모의 직업적 배경이나 네트워크, 인사이트가 없어도 AI를 통한 정보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AI는 자녀의 진로 탐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가능하게 해준다. 관심사와 재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진로에 관한 대화 방식, 탐색해볼 만한 루트 발견 또한 AI의 도움으로 쉬워질 수 있다.

어떤 직종에 진출하기 위해 어느 대학에 가야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도 AI와 함께 알아볼 수 있다. 진로 계획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분야의 취업 경쟁률, 수입 수준의 변동성, 업계의 미래 전망, 필요한 추가 학습이나 재교육 등도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AI가 있다고 해서 자녀의 진로 탐색에서 부모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의 성격, 가치관, 생활 패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수많은 정보 중 자녀에게 적합한 것을 선별하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AI 시대에서 부모는 정보 제공자에서 진로 탐색의 조력자로, 직업 승계의 전수자에서 자녀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가이드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정보 접근성이 향상됐지만, 그 정보를 자녀 특성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한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데이터 과학자



## 전자신문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023면 인물

### 인사

- ◆교육부 △운영지원과장 이태주 △영유아정책총괄과장 김성근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남점순
-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 박정원 △인프라운영부장 이형근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사업단장 이지영 △글로벌협력실장 최영준 △총무자재실장 전정아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유정석

## 한국일보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A24면 사람들

### 인사

- ◆교육부 ◇부이사관 △운영지원과장 이태주 △영유아정책총괄과장 김성근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남점순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유정석
- ◆극지연구소 ◇발령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 박정원 △인프라운영부장 이형근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사업단장 이지영 △글로벌협력실장 최영준 △총무자재실장 전정아
- ◆경인방송 △서울취재본부 본부장 광경호

## 세계일보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024면 사람들

### 인사

- 교육부 △운영지원과장 이태주 △영유아정책총괄과장 김성근
-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 박정원 △인프라운영부장 이형근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사업단장 이지영 △글로벌협력실장 최영준 △총무자재실장 전정아

## 朝鮮日報 부음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A23면 사람들

▲박규옥 별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황창근 흥익대 교수·황호근 세무사·황정모·황정미·황정화·황정선 모친상, 윤정로·이영교 좋은세무회계 대표·이봉학 공인회계사 장모상, 김용희 평택대 교수 시모상=21일5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9시, (02)2258-5940  
▲신태복 별세, 신정수 풍석문화재단 이사장·신승수 부친상, 조정식 前 한국유리 상무 장인상, 이종빈·이향미 시부상=21일19시34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8시30분,

(02)3410-3151

▲유병선 별세, 유재학 KBL 경기본부장 부친상=22일10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4일9시30분, (031)787-1500

▲이옥수 별세, 윤다예 매드포갈릭 대표 모친상=22일6시44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11시, (02)2227-7500

▲황선학 경기일보 문화체육부 국장 별세, 우수분 남편상=22일4시30분 아주대병원, 발인 24일7시, (031)219-6654